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서 면 답 변 서

(2025년도 병무청 종합감사, '25. 10. 30.)



병무청

의원별 목차

(질의순)

1. 박선원 의원	1
2. 김병기 의원	3
3. 정청래 의원	6
4. 황 희 의원	10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1-1. 양형위원회에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조치 계획은?

<병무청 병역자원국>

-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병역면탈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병역면탈 범죄 양형기준 설정」 등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양형기준 신규 설정 논거를 구체화하고,
-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조하여 '27년 양형기준 설정 시 병역면탈 범죄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

-----<참고자료> -----

○ 병역면탈 처벌 강화 등 추진경과

- 최대 형량 상향(병역법 제86조)

2005. 12. 31. 이전	⇒	2006. 1. 1. 이후(시행)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최소 형량 상향 추진(병역법 제86조) * 의원입법 발의('13.6.27.)
 - * 내용 : (현행)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개정)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 결과 : 법사위 소위 미상정(죄형 균형, 타 법률 벌칙과 형평성 고려)
- 병역면탈 범죄 양형기준 신규 설정 수요 제출(대법원 양형위, '23.5.17./'25.5.26.)
 - * (미선정) 다른 범죄에 비해 양형기준 설정의 시급성이 낮음
- 병역면탈 범죄 양형기준 설정 등 형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연구기관 / 기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5. 6월 ~ 11월(5개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위원

<김병기 의원>

6-1. 병역법 제21조제3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네,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끝>

-----<참고자료>-----

- 병역법 제21조제3항(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2조(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순위), 제4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

우선선발 (정원외)	· (직권) 수형 사유자 · (신청) 자녀양육자,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자(생계곤란)
일반선발	· ① 학력 낮은 순, ② 신체등급 낮은 순

- 연도별 상근예비역 계획 및 선발사유별 입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획인원	입영인원 (①+②)	일반선발 ①	우선선발②			
				소계	수형	자녀 양육	가사 (생계곤란)
2025.8월	3,606	2,386	2,060	326	200	114	12
2024년	2,047	2,300	1,948	352	209	131	12
2023년	6,015	5,862	5,348	514	314	183	17
2022년	5,277	5,330	4,798	532	287	218	27
2021년	10,299	10,012	9,439	573	310	237	26

<김병기 의원>

6-2. 굳이 수형자들에 대한 상근예비역 처분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국방부, 각 군과 협의하겠습니다.<끝>

<김병기 의원>

6-3. 수형자들에 대해 별도의 복무형태 도입을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국방부, 각 군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끝>

더불어민주당 정 청 래 의원

<정청래 의원>

8-1.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에서는 전자식으로 사회복지요원 근태관리를 하고 있어 복무기록을 연동하면 병무청에서 즉시 근태확인이 가능함. 굳이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가?

<병무청 사회복지국>

- 병무청은 사회복지포털을 통해 복무기관에서 입력한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다수의 복무기관에서 출퇴근 관리를 수기 서명 방식으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 부실 관리 예방과 출퇴근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이 사회복지포털에 자동 입력되는 모바일 기반 '전자적 출퇴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체 복무기관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 복무기관 자체 전자적 출퇴근 관리 기관: 111개(전체 복무기관의 0.9%, '25.10월)

<정청래 의원>

8-2.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은 이미 2년 전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음에도 앞으로도 1년을 넘게 더 기다려야하는 상황임. 올해 50억, 내년에는 120억을 더 들여야 시스템 구축이 되는 상황이던데, 복무기관으로부터 근태기록을 연동받아 근태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병무청 사회복무국>

-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에 포함, '27년 시행을 목표로 하여 '23년 ISP(정보화전략계획), '24년 예산반영을 거쳐 '25년부터 '26년까지 시스템 설계 및 구축하는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 예산 : 7억 9백만원

- 주요 개선사항은 모바일을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 출퇴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복무현장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향후 시스템 구축, 운영 시 수기로 작성·관리하는 출퇴근 명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정청래 의원>

8-3. 병무청은 ‘최근 5년간 사회복지무요원 근무지 변경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하였는데,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닌가?

<병무청 사회복지무국>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지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시
복무분야와 근무지를 지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복무기관의 장에게 근무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업무 활용도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필요시 순환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변경 내역은 법령에서 정한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근무지 지정 이후 변경 내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향후 근무지 변경 내역 관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끝>.

더불어민주당 황희의원

<황희 의원>

9-1.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 선별되어야 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인지?

<병무청 병역자원국>

- 심리취약자 및 정신질환 위험군 선별을 위해 심리 및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4단계 체계로 강화하였습니다.
- 향후 임상심리사 인력증원, 심리검사도구를 개선하는 등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황희 의원>

9-2. 귀가제도 폐지로 군의 지휘·관리부담 가중 우려 있음.
입영판정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검토중인지?

<병무청 병역자원국>

- 귀가 시 학업·취업 등 장래계획 차질로 큰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21년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후 '25. 7. 1.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귀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각 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귀가제도 폐지로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 등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되어 심리검사 강화, 색각검사 개선 및 매독검사 확대시행 등 군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향후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단계에서 현역복무 부적응우려자를 철저히 선별하고,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부상 발생 시에는 현행 질병사유 연기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의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 <끝>

<황희 의원>

9-3. 복무부적응 판정으로 조기 전역하는 인원의 상당수가 사회복귀 이후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병무청의 복무부적응자 사후관리 및 재적응 지원체계는 미흡함. 병무청은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전역 이후 사후관리 및 재적응 지원을 위해 어떤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병무청 사회복무국>

- 현재 복무부적응으로 조기 전역한 사람에 대해 사회보장서비스(심리·복지·취업) 지원제도를 국방부, 병무청·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 안정적인 사회적응 및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

<황희 의원>

9-4.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이나 검사 절차 개선 등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계획이 있는지?

<병무청 병역자원국>

- '26년 임상심리사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며,
- 향후 관계기관(행안부)과 적극 협조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정밀심리검사 담당 임상심리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복지부)과
협조하여 치료비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황희 의원>

9-5. 병역판정검사 1차 심리검사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현황과 병역판정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방안은?

<병무청 병역자원국>

-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 적용 결과를 모니터링 및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 향후 국방부(KIDA)와 협조하여 1차 심리검사도구 정확도
향상을 위한 도구 개선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황희 의원>

9-7.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판정 검사 품질과 대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병무청은 전담의사 확보를 위한 인력운영 및 예산 지원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병무청 병역자원국>

- 전담의사를 최대한 충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겠습니다.
- 불가피하게 전문의를 100% 충원할 수 없는 경우, 일반의(레지던트 고연차 순) 전담의사를 최대한 충원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군의관 파견 근무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결원 과목에 대해 업무대행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의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결원에 따른 업무대행 수당 등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인력운영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

<황희 의원>

9-8. 군의관 수가 줄어듦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전담의사 공백을 군의관 파견으로 대체하는 방식에 대한 실효성에도 우려가 있음. 전담의사 확보 대책으로 군의관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병무청 병역자원국>

- 군복무 곤란자를 선별하는
전담의사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관 파견요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를
“입영판정검사”로 전환하여
'25. 7. 1.부터 병무청에서 전면 실시하는 만큼
- 전담의사 충원 또는 군의관 파견으로
차질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끝>

-----<참고자료> -----

- 군의관 파견 관련 법령 : 「병역법」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 ▶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를사만으로 신체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황희 의원>

9-9. 입영자원 감소시대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병역이행자 예우제도는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적용 기준도 일관되지 않음.
병역이행자 예우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지 보고할 것.

<병무청 기획조정관, 입영동원국>

- 병역명문가의 예우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혜택 범위를
관내 거주자에서 전국 거주자로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병역이행자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체감할수 있는 혜택제공을
위해 안경점, 음식점, 병원 등과 협약하여 나라사랑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들이 선호하는 여행, 영화관 등 업종의 업체와
협약을 확대하여 예우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끝>

-----<참고자료>-----

○ 나라사랑가게 제도

- 병역이행자(병역명문가, 예비군훈련 이수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자 등)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가게

* 나라사랑가게 업종별 현황

(’25. 8. 31. 기준, 개)

계	전자	안경점	음식점	병원	미용실	카페	관광	체육,여가	학원	여행사	기타*
2,340	10	790	384	247	202	145	47	231	149	3	132

* 피부관리등, 꽃가게, 사진관, 의류, 행정사무소, 자동차, 마트, 컴퓨터, 약국, 침구, 화장품, 서점, 소매업

<황희 의원>

9-10. 국적포기 병역의무대상자 증가로 인한 병역의무 회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국적이탈 최소화 및 재외병역관리 강화를 위해 병무주재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병무청은 병무주재관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재외병역관리 강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보고할 것.

<병무청 입영동원국>

- 병역의무자가 많은 미국과 일본에 병무주재관 신설 소요를 외교부에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 앞으로도 재외병역관리 강화를 위한 재외공관 병무주재관 파견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또한, 국적변경 또는 연령초과로 병역이 면제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상향하는 법안이 입법화되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25세이상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엄정 운영하며 영주권자 등의 자발적인 병역이행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병역이행을 장려하겠습니다.

<황희 의원>

9-11. 병역면탈을 도와주는 이른바 '병역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전담할 인력 확충을 위해 대책은?

<병무청 병역자원국>

- 대법원(양형기준 신설 요청) 및 대검찰청(구형 상향 필요성 설명)과 적극 협조하여 병역 브로커 등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병무청은 '23년부터 특사경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조직) 본청 1개과 및 지방청 1개과 신설 / (인력) 기존 40명에서 60명 증원
- 앞으로도 기피자 수사 등 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특사경 인력 충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

-----<참고자료> -----

- ('23년) 조직진단 결과 반영,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조직개편('23.12.31.)
 - 본청 사이버조사과 및 경인청 병역조사과 신설
 -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한 특사경 인력보강 : +16명
- ('24년) 병역면탈 수사 업무량 증가에 따라 소요정원 증원('24.2.27.)
 - 본청 2명, 서울청·경북청 각 1명, 총 4명 증원
 - * 서울청·경북청 증원은 한시임기제 6급 각1명
- ('25년) 병역기피자 등 수사인력 증원 및 한시임기제 정규화 추진
 - 병역기피자 수사인력 1명 증원(정시), 한시임기제(2명) 정규화 요청

<황희 의원>

9-12. 사회복지요원 장기대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인원이 매년 1만 명 이상으로 근무지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도 다수 존재함. 사회복지요원 배정/미배정 현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병무청 사회복지국>

○ 사회복지요원 배정/ 미배정 현황

(단위 : 명)

연도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요청	배정	%	요청	배정	%	요청	배정	%	요청	배정	%
'25년	2,487	2,420	97.3	8,071	7,832	97.0	3,298	3,267	99.1	13,583	12,003	88.4
'24년	2,431	2,398	98.6	9,182	8,988	97.9	3,981	3,963	99.5	14,507	13,172	90.8
'23년	2,519	2,469	98.0	9,906	9,767	98.6	4,358	4,345	99.7	13,749	13,000	94.6

○ 사회복지요원 미배정은

복무기관에서 요청한 인원보다 소집자원이 부족하거나, 도심 외곽 등에 위치해 출·퇴근이 제한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무 가능지역의 수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

<황희 의원>

9-13. 병무청이 사회복지요원 소집대기 기간 단축을 추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구체적인 추진 일정, 감축 목표, 제도개선 방안 등 세부 계획은?

<병무청 사회복지국>

- 사회복지요원이 적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 수도권 등 인구집중 지역의 수요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며,
- 복무기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국고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끝>

<황희 의원>

9-14. 소집대기 기간 단축 시 전시근로역 전환 인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는지?

<병무청 사회복무국>

-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대기기간 단축은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소집기회 확대 등을 통해 장기대기 인원을 감축해나가겠습니다. <끝>

-----<참고자료>-----

- 복무 형태별 복무기간

(단위 : 개월)

구 분	현 역			사회 복무	산업기능		전문 연구	승선 예비역	대체역
	육군	해군	공군		현역	보충역			
기 간	18	20	21	21	34	23	36	36	36